진 행 순 서

❖ 제1부 개회식 (오후 14:00~14:30)

○ **국민의례**

○ **개 회 사**

– 국회의원 이계경 (한나라당)

○ **축　　사**

– 국회의원 임태희 (여의도연구소 소장)

– 국회의원 박순자 (한나라당 여성위원장)

❖ 제2부 토론회 (오후 14:30~16:00)

○ **사　　회**

– 조은희 (연구공간 여성과 정책 대표)

○ **주제 발제**

「여성들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여론조사)」

– 육정희 (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 연대 상임대표)

「참여정부 여성 정책 평가」

– 김태현 (前한국여성학회 회장, 성신여대 교수)

「대선주자에게 바라는 여성정책」

– 이계경 (국회의원, 한나라당)

○ **종합 토론**

– 박명순 (경인여대 교수)

– 문경란 (중앙일보 논설위원)

○ **질의응답**

○ **폐　　회**

목 차

▶ **인사말**
이 계 경(국회의원, 한나라당) _ 1

▶ **여성들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제 1차 여성유권자 조사 결과-**
육 정 희(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 연대 상임대표) _ 3

▶ **참여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제언**
김 태 현(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교수) _ 23

▶ **한나라당의 우먼액션플랜(WAP:Woman Action Plan)**
이 계 경(국회의원, 한나라당) _ 41

▶ **토 론**
박 명 순(경인여대 교수) _ 55

▶ **토 론**
문 경 란(중앙일보 논설위원) _ 59

▌인사말▐

여성들이여! 행동으로 나서자!

이 계 경(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치는 여성들의 삶과 친밀하게 연관되어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집을 사거나 팔 때, 쓰레기 분리수거나 내 집 앞 주차를 누가 할 것인가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재료들의 위생과 안전의 척도를 결정하고 자녀의 출산, 보육, 교육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하늘의 절반"인 여성들이 정책과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를 절반만큼 가지게 된다면 우리 정치는 삶의 질을 말하고 우리 이웃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 절반의 획득은 여성의 권리이며 우리 미래를 위한 의무입니다. 여성문제는 더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성의 지위향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통합적 대안 담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나올 만큼 여성계 진영 내부의 혼선과 갈등을 넘어 다양한 그룹으로부터 역풍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성정책의 빈곤화는 여성의 빈곤화를 촉진하였던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에 앞서 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견제와 자세에 대한 자성도 함께 해 봅니다.

이 토론회는 본 의원과 한나라당 여성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여의도 연구소가 주관하여 한나라당의 본격적인 여성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여성단체인 〈아줌마를 키우는 아줌마연대〉가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고 여성문제 전문가의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와 여성이 원하는 정책을 고안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연대(아키아연대)는 오즈마케팅에 의뢰하여 전국의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1)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참여정부가 약속한 여러 공약의 실천 과정에서 국민 체감도 평가 2)여성유권자들의 관심 정책 내용 3)여성유권자들의 여성관련 정책 관심도 4)유성유권자들의 원하는 대통령 후보의 자질 5)여성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여성친화적인 후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전 여성학회 회장이신 성신여대 김태현교수께서는 참여정부의 여성유권자 조사를 토대로 참여정부의 여성관련 공약 현황과 평가를 밀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한나라당의 후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우먼 액션플랜(WAP:Woman Action Plan)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성정책이 지도자의 철학과 비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진지한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권자의식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으로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12월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차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됨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바쁘신 가운데에도 여성계의 훌륭한 자문가 그룹이 난상토론을 통해 의제를 설정하고 숙의를 거듭하여 마련됨을 밝힙니다. 양성평등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들의 진지한 노력과 토론이 준 영감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회를 거쳐 진화된 논의는 차기정권의 풍부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우먼액션플랜은 계속 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좋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007. 4. 9

국회의원 **이 계 경**

여성들이 체감하는 여성정책

-제 1차 여성유권자 조사 결과-

육 정 희 (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 연대 상임대표)

여성들이 체감하는 여성정책
-제 1차 여성유권자 조사 결과-

육 정 희 (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 연대 상임대표)

국회의원 이계경과 사단법인 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 연대는 새로운 대선정국에 즈음해서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공약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또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여성유권자 대상의 조사를 전문여론조사 회사인 "오즈마케팅"에 의뢰 하였다.

사단법인 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연대는 1999년 우리나라에서 아줌마로 불리는 보통여성들이 자신과 가정, 사회 속에서의 위치를 돌아보고 자신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새롭게 깨어나 사회변화에 주체적으로 동참하기위한 신 주부캠페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동안 일반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건전한 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아키아연대는 신주부 아카데미, 아키아 포럼, 여성 증권 아카데미 등을 통해 여성들의 자기계발을 돕고 여성 문화 유적지 답사, 좋은 영화 감상회, 아줌마 문화축제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문화 소비자와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왔다.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그 동안 참여정부가 약속한 여러 공약이 실천에서 부진하였고 그 효과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 받음에 따라, 본 단체에서는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를 평가해보고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현 정부가 약속한 공약에 대한 평가
둘째, 여성 유권자들의 관심 정책 내용
셋째, 여성 유권자들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넷째, 여성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의 자질
다섯째, 여성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여성 친화적인 후보

2. 조사방법

1) 조사 기관: 오즈마케팅
2) 자료 수집 방법 : 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3) 조사 지역 및 사례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1,000명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계
500명	2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0명

예상 표본 오차율 : 95% 신뢰도 기준에 ± 3.1%의 오차

지역 쿼터는 인구비례를 기본으로 하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와 대전은 최소 샘플 100명으로 조정하였다.

4) 조사대상자 : 만 19세 ~ 만 69세의 여성 유권자
5) 조사 시기 : 2007년 3월 6일 – 3월 20일

3. 응답자의 특성

1) 연령별

19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 이상	계
28.5%	27.4%	21.2%	22.9%	100%

2)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계
50%	20%	10%	10%	10%	100%

3) 직업별

학생	전업주부	직장인	기타	계
16%	34.7%	43.1%	6.2%	100%

4) 결혼여부

기혼	미혼	이혼/사별	계
62.2%	33.6%	4.2%	100%

4. 조사결과

1) 참여정부 공약 평가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발표한 공약을 정리하여 갈등극복,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빈부격차 해소(국민 70%의 중산층 시대), 최상의 복지로 행복한 나라, 공교육의 질 높이기, 보육문제 해결,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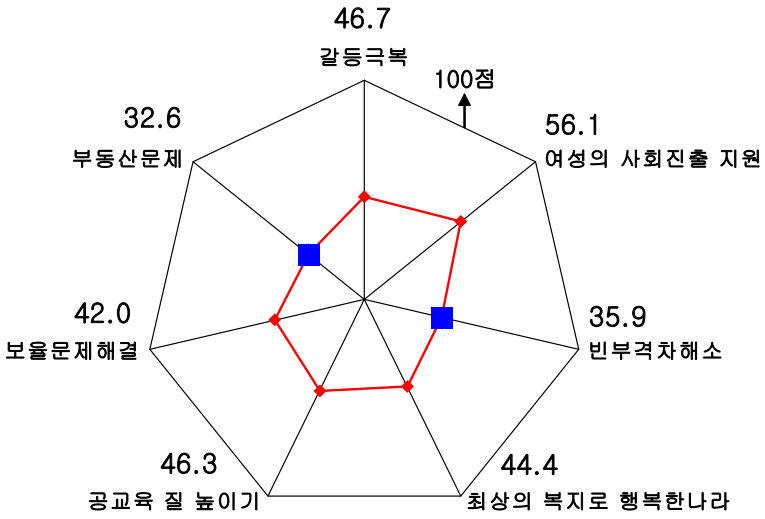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의 50점미만의 저조한 평가를 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는 부동산 32.6점으로 미혼여성들이 31.1점, 50세 이상의 여성들이 31.3점, 학생이 29.7점,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에서 24.2점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다음으로는 빈부격차 해소에 대하여 35.9점으로 낮게 평가하였는데 여기에는 이혼/사별한 여성들이 32.4점, 서울/수도권에서 29.7점으로 평가하여 평균치 이하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보육문제에 대한 만족도가 42점으로 낮았는데 특히 미혼여성(41.1점)과 직장여성(40.0점)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출산율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

그 중에서 약간 나은 50점대를 얻은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지원”이 유일하였다.

교육관련 불만에서 연령별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며 직업별로는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평가는 서울 지역이 24.2점이었으며, “빈부 격차 해소”는 서울이 29.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참여정부의 공약이해에 대한 평가

각 각의 공약은 다시 세부적인 내용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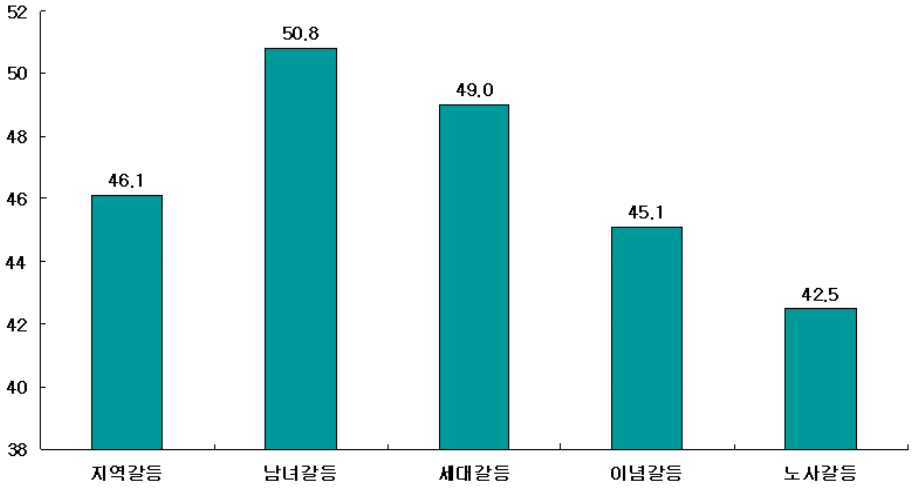
1)-1. 갈등 극복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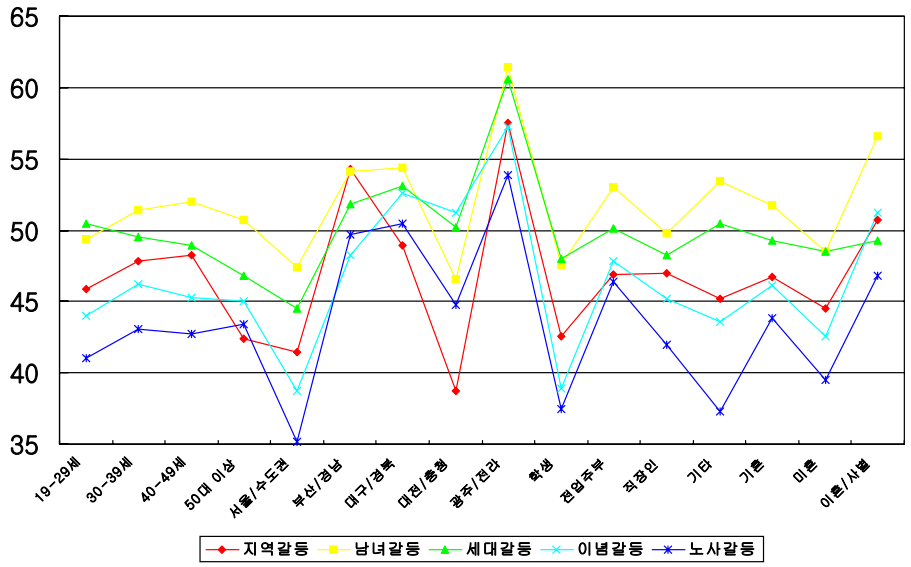
갈등 극복의 세부내용으로는 지역갈등, 남녀갈등, 세대갈등, 진보 보수 등 이념갈등, 노사갈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해 보았다.

전체적인 평가는 47.6점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그중 노사갈등이 42.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극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령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직업별로 보면 학생들이 갈등 극복에 대하여 다른 계층보다 더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는 58.1점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주었으나, 서울/수도권은 41.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그림 2〉 갈등극복에 대한 세부항목 이행평가

1)-2. 여성의 사회 진출 지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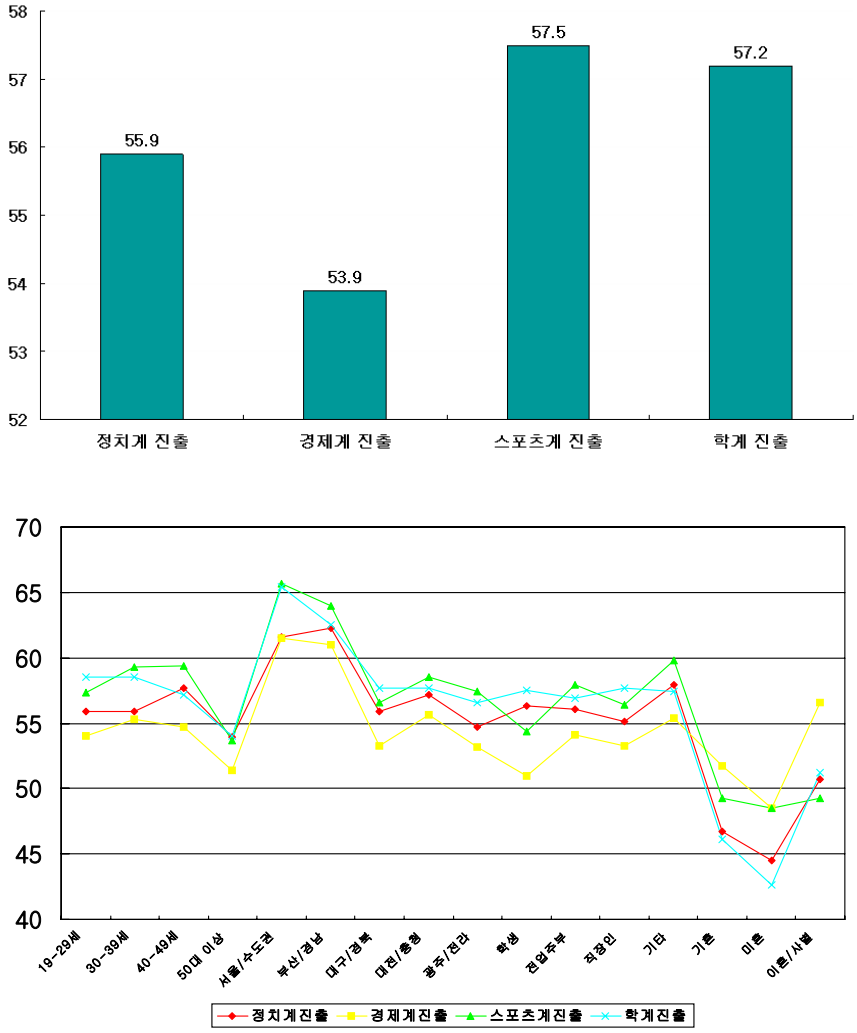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남녀 불평등 요인을 해소해 성에 의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지원에 대한 세부항목은 정치계 진출, 경제계 진출, 스포츠계 진출, 학계 진출로 구분해 보았다.

전체적인 평가는 56.1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7개 공약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령별, 직업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과 광주/

전라는 63.6점과 62.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였고, 서울/수도권은 53.2점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



〈그림 3〉 여성의 사회 진출 지원에 대한 세부항목 이행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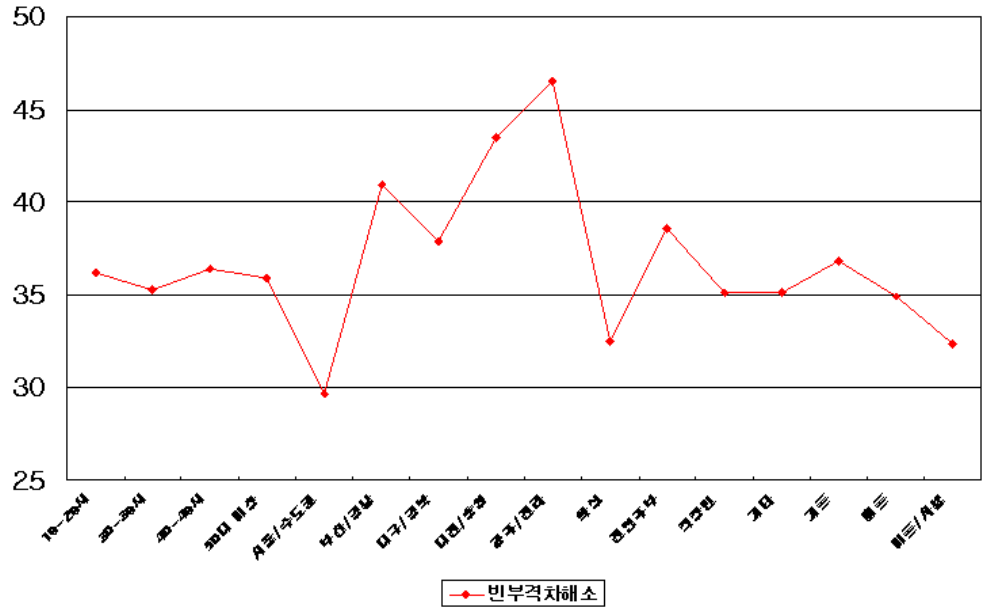
1)-3.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

현 정부의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공약은 “아주 못했다(35.9점)”는 평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고, 직업별로는 전업주부는 (38.6점)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으나, 학생은 (32.5점) 아주 낮게 평가를 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46.5점) 높게 평가하였고, 서울/수도권에서는(29.7점)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도표 4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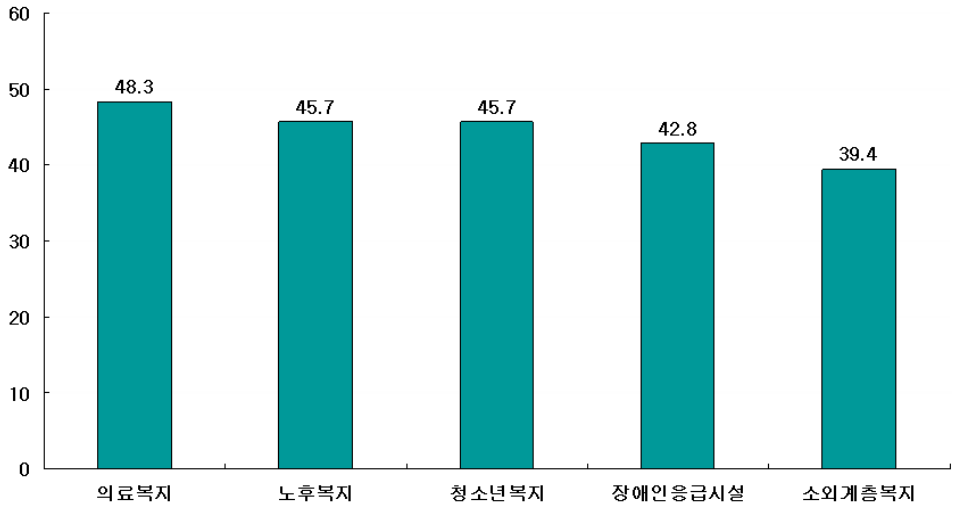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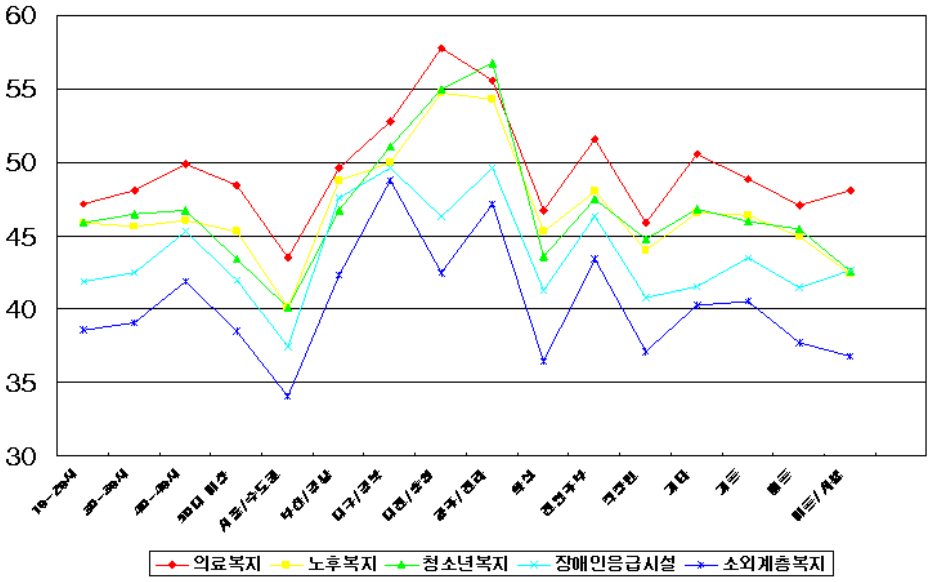
1)-4. 최상의 복지로 행복한 나라에 대한 평가

복지 부분은 의료복지, 노후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 응급시설, 소외계층 복지로 구분하여 평가해 보았는데 “최상의 복지로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실현을 100점 만점에서 44.4점 정도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중 소외계층 복지부분은 39.4점으로 이혼/사별 여성으로부터 36.8점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평가 역시 연령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전업주부들은 학생이나 직장인보다는 약간 높게 평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높게 평가하였고 서울/수도권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도표 5 복지평가에 대한 세부항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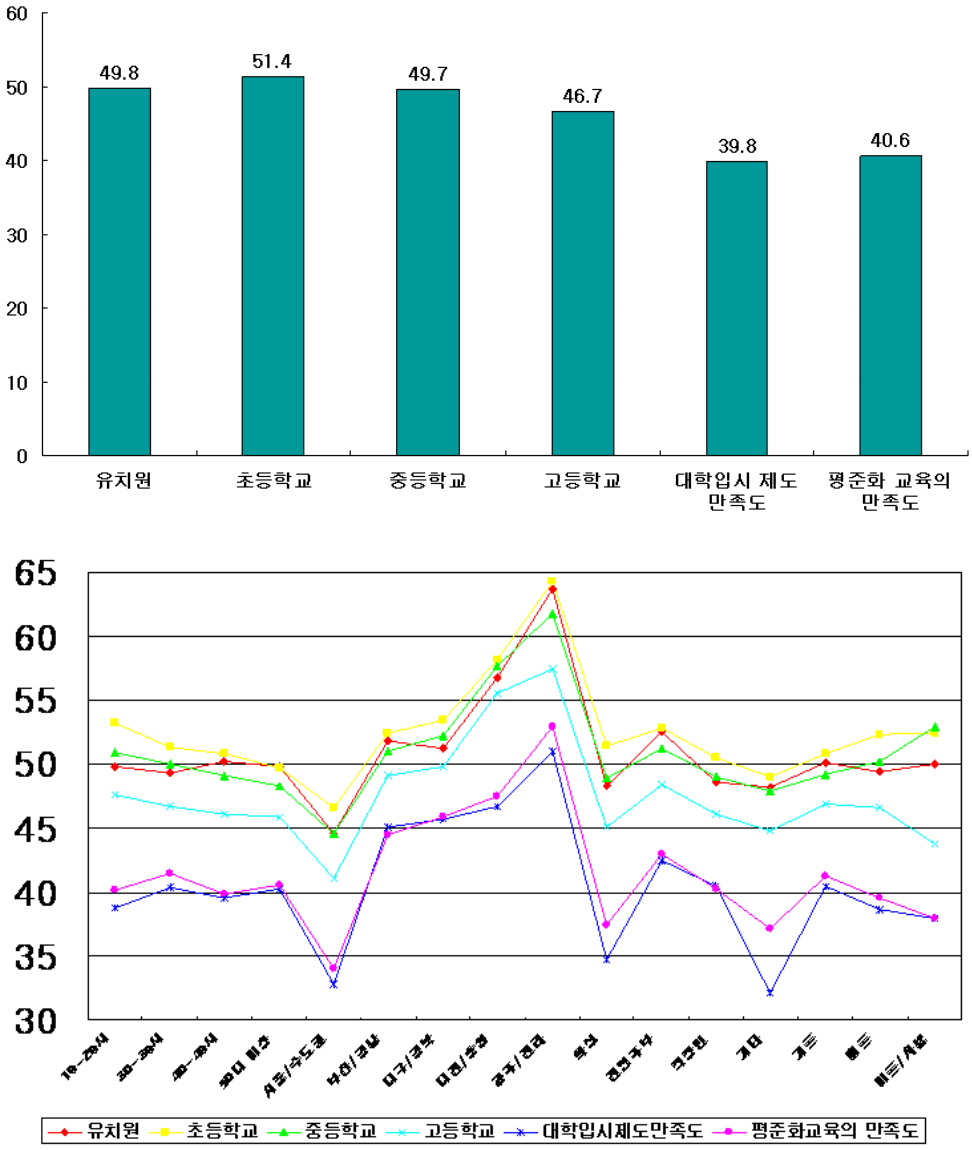


1)-5. 공교육 질을 높이겠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

공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입시제도, 평준화 교육의 만족도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다. 전체적으로는 공교육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잘하지 못했다(46.3점)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39.8점으로 제일 낮았으며 특히 학생들이 34.7점으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51.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령별, 직업별로는 평가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는

높게 평가하였고, 서울/수도권은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그림 6 공교육 질을 높이겠다는 부분에 대한 세부항목 평가〉

1)-6. 보육 문제 해결에 대한 평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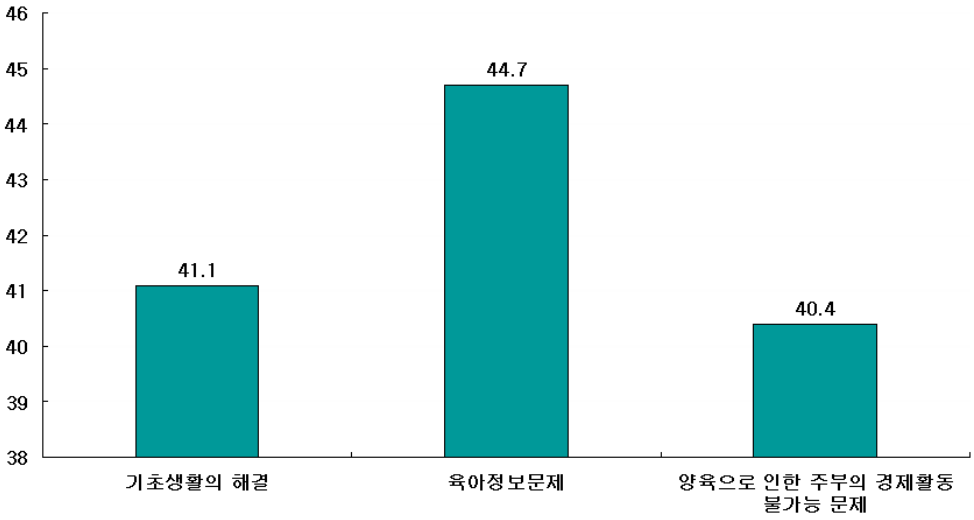
보육문제는 분유값 등 기초생활의 해결, 육아정보, 양육으로 인해 주부들의 경제활동 장애로 세분화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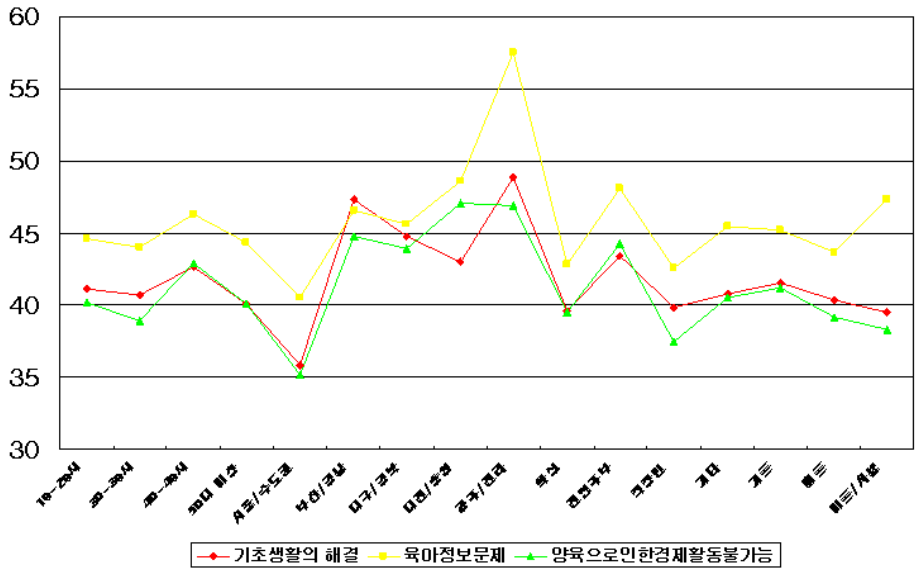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42.0점으로 낮게 평가 받았는데 특히 양육으로 주부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40.4점으로 이혼/사별한 여성과 30대 여성, 직장여성들이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학생과 직장인 보다는 약간 좋은 평가를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른 평가와 마찬가지로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다.

〈도표 7 보육 문제 해결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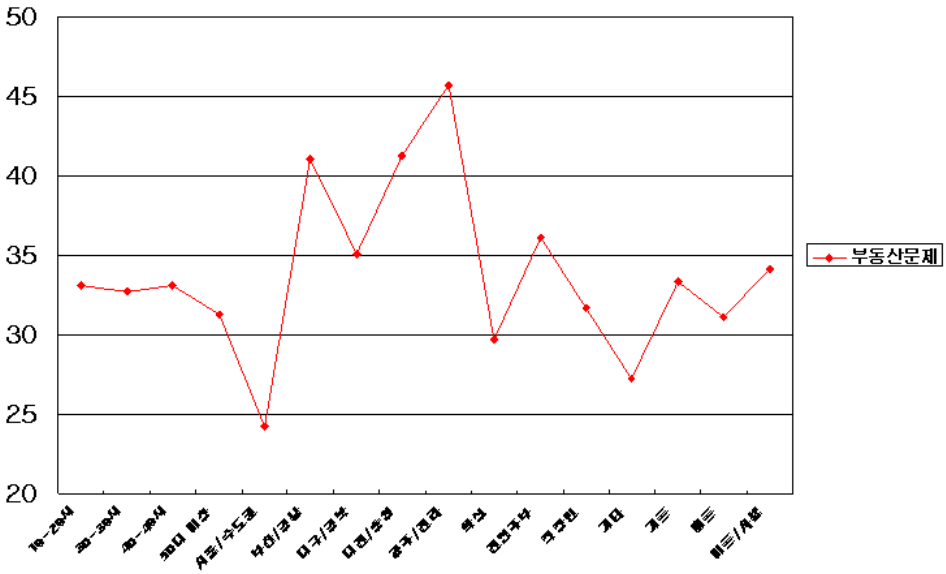




1)-7. 부동산 문제에 대한 평가

전체 평가 32.6점으로 7개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다. 특히 미혼여성이 31.1점, 50대 이상의 여성이 31.3점, 학생이 29.7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한 것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도표 8 부동산 문제에 대한 평가〉



2)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국가 정책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국가 정책으로는 경제(28.1%), 교육(19.8%). 부동산(17.3%), 복지(16.4%), 보육(6.8%), 여성정책(4.5%)의 순서로 나타났고 문화, 정치제도, 국방/외교는 관심이 낮은 분야로 나타났다.

"경제"에 대한 관심은 기혼여성과 40-50대에서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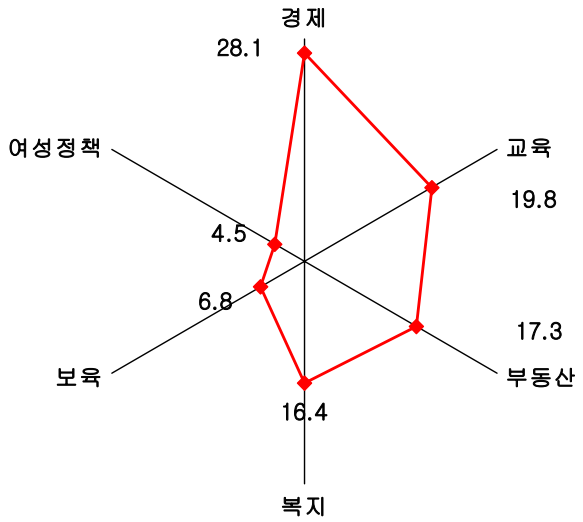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역시 기혼여성과 30-40대, 학생과 전업주부들의 관심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높았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40-50대와 직장여성,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지"에 대한 관심은 이혼/사별한 여성과 50대 이상 여성의 관심이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의 관심이 높았다.

"보육"에 대한 관심은 30대 전업주부와 직장여성 모두의 관심이 높았고 역시 광주/전라지역의 관심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미혼여성과 20대 여성이, 학생과 부산/경남지역의 관심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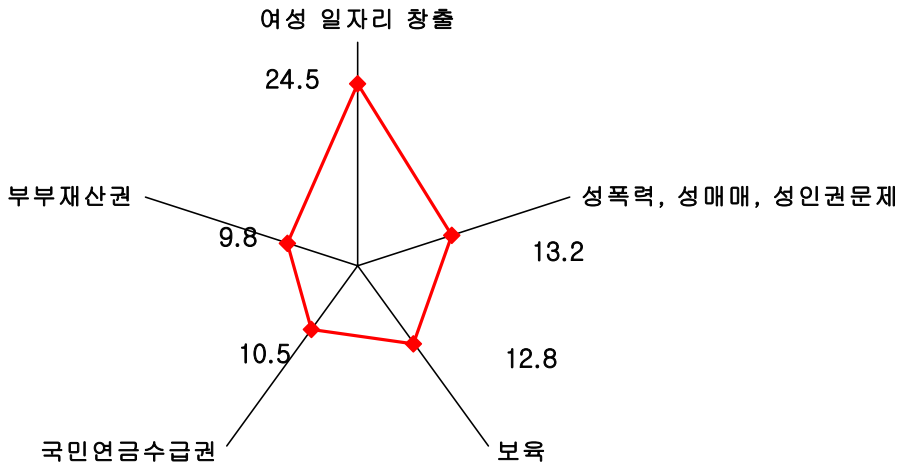
〈그림 9〉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국가 정책

3) 여성관련 정책 중 관심 있는 분야

여성 관련 정책 관심사로는 여성 일자리 창출 (24.5%), 성폭력, 성매매, 성인권문제 (13.2%), 보육 (12.8%). 국민연금 수급권 (10.52%), 부부재산권 (9.8%)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성 일자리 창출"에 관심 있는 계층은 미혼, 학생층과 부산/경남 지역이었고 "성폭력, 성매매, 성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계층은 미혼, 20대, 학생 이었다. "보육"은 이혼/사별 여성의 관심이 높았고 "고령화 여성 노인 문제"는 이혼 가정과 50대 이상의 여성의 관심이 높았으며 "부부 재산권"은 기혼 여성들과 50대 이상의 여성들의 관심 사항이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1,2,3위로 응답하게 하고,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weight를 주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 일자리 창출, 성폭력, 성매매, 성인권문제, 보육, 국민연금 수급권의 순으로 1위로 응답한 결과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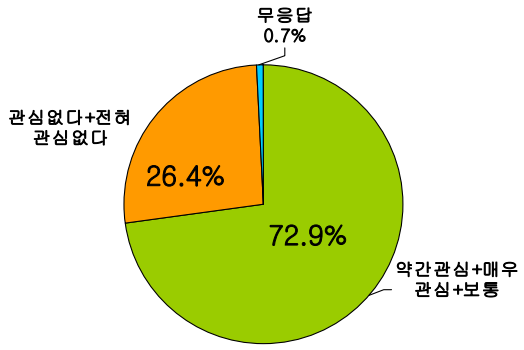
〈그림 10〉 여성관련 정책 중 관심 있는 분야

4. 여성정책을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의 고려 정도

17대 선거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약간 관심 + 매우 관심”의 비율이 44.8%로 “관심 없다 + 전혀 관심 없다”의 26.4%보다 높았다.

“약간 관심+매우 관심”의 비율은 미혼, 20대, 학생, 대전/충청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평소에 여성정책을 부각해서 내세운 대통령 후보가 없었다는 생각 때문인지 갑작스럽게 받은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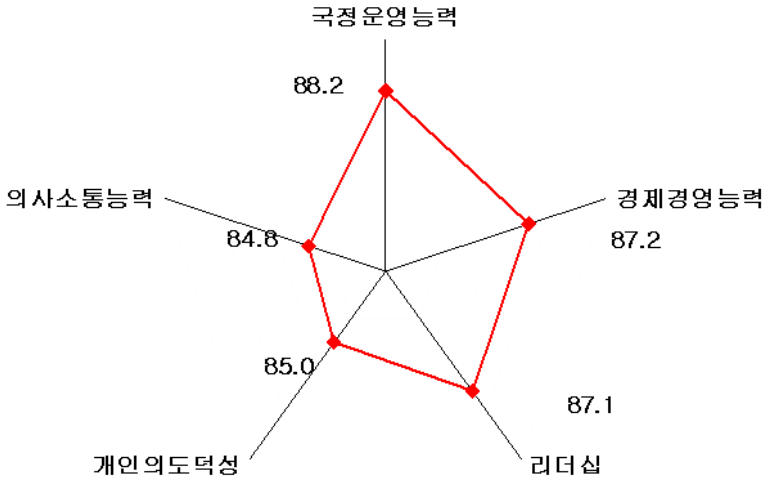
〈그림 11〉 여성정책을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의 고려 정도

5. 차기 대통령의 자질 항목의 중요도

차기 대통령의 자질로 각 항목의 중요도를 물어 본 결과, 거의 모든 항목이 중요하다는 반응이었으나 혈연지연은 그다지 중요한 자질이 아니며 앞으로 배제 되어야 할 부분으로 응답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국정 운영 능력(88.2점)과 경제 경영 능력(87.2점), 리더십 (87.1점), 개인의 도덕성(85.0점), 의사소통 능력(84.8점)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서울/수도권 유권자들은 혈연, 지연, 학연 및 배경과 후보의 이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고 부산/경남지역에서는 특히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국정운영능력, 경제경영능력, 리더십, 양성평등 의식에 모두 90점 이상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12〉 차기 대통령의 자질 항목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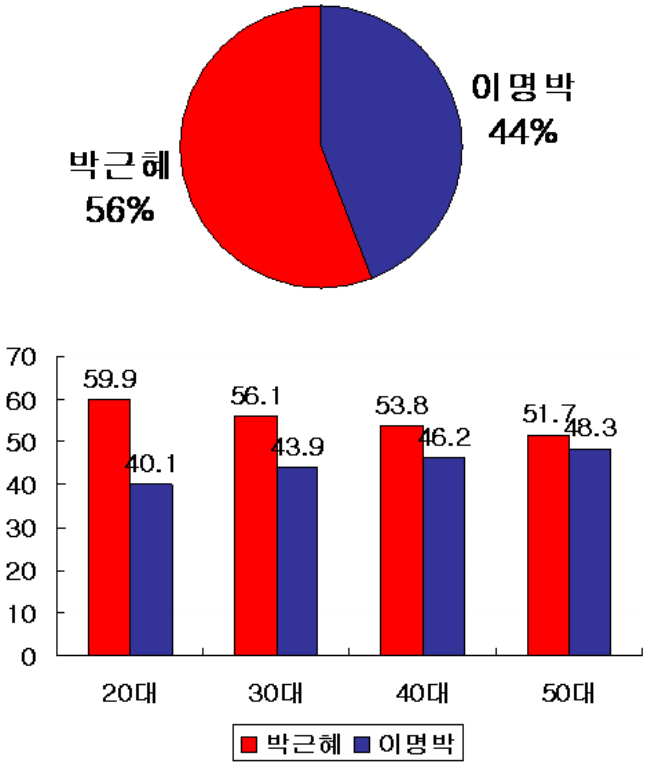
6) 가장 여성 친화적인 대통령 후보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가 후보를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여성 친화라는 전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선호 후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 친화적인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는 후보는 박근혜 (36.0%), 이명박(28.5%), 정동영 (4.1%), 손학규 (3.7%), 한명숙 (2.9%), 강금실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이명박은 나이 들수록 여성 친화적인 후보로 지목되었으며 박근혜는 젊은 층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표 13 가장 여성 친화적인 대통령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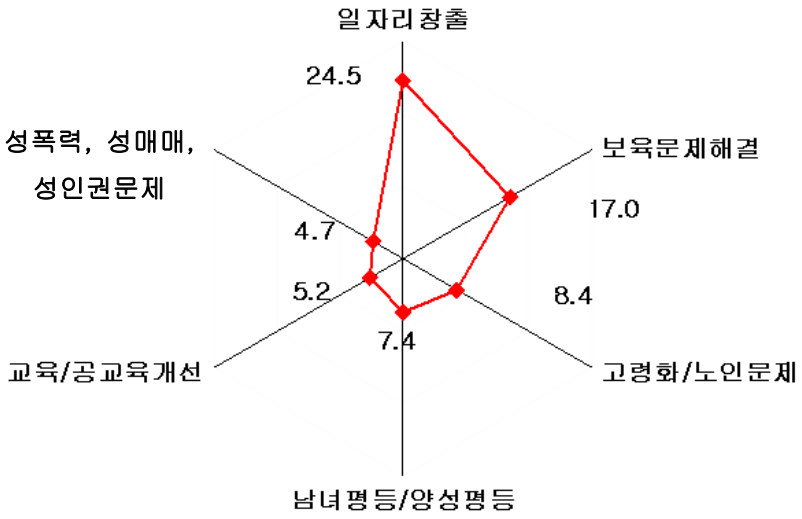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박근혜는 서울, 경상, 충청에서 강세이고, 이명박은 경남, 전라에서 강세로 나타났다. 또한 정동영과 손학규는 전라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

7) 차기 정부가 여성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차기 정부가 여성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일자리 창출 (24.5%), 보육문제해결 (17.0%), 고령화/노인문제 (8.4%), 남녀평등/양성평등 (7.4%), 교육/공교육 개선 (5.2%), 성폭력, 성매매, 성인권문제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은 미혼, 20대, 학생, 부산/경남 지역에서 응답률이 높았고,

“보육문제 해결”은 미혼, 20대와 30대, 대전/충청과 서울/수도권에서 높았고 “고령화/노인문제”는 50대 이상, 전업주부, 부산/경남 지역에서 높았다.



〈그림 14〉 차기 정부가 여성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5. 결론

이번 조사는 전국 최초로 다양한 연령층과 분야의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당초 공약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와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차기 정부에서 여성정책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참여정부의 공약이 정책으로 수행되는 중에 특히 부동산 문제와 빈부격차 해소 부분에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기정부의 여성정책 우선순위로 여성일자리 창출을 가장 원하고 있어서 오늘의 어려운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 개발과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요망된다.

안녕하십니까?
여성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좀 더 나은 정책개발을 위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성명 : _____ ▶ 성별 : 여자만 할 것

▶ 결혼상태 : 1) 기혼 2) 미혼 3) 이혼 또는 사별 후 독신 등

▶ 연령 : 1) 19-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대 이상

▶ 직업 : 1) 학생 2) 전업주부 3) 직장인(파트타임 포함) 4) 기타

▶ 지역 : 1) 서울/수도권 2) 부산/경남 3) 대구/경북 4) 대전/충청 5) 광주/전라

▶ 면접원 성명 : _____ ▶ 면접 일시 : _____

문1. 지금의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입니다. 다음 정책을 여성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어느정도 잘 수행됐다고 생각하는지 느낌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점 만점 1.잘 안됨<->10. 매우 잘됨)

갈등 극복	지역 갈등	1	2	3	4	5	6	7	8	9	10
	남녀 갈등	1	2	3	4	5	6	7	8	9	10
	세대 갈등	1	2	3	4	5	6	7	8	9	10
	진보 보수 등 이념 갈등	1	2	3	4	5	6	7	8	9	10
	노사 갈등	1	2	3	4	5	6	7	8	9	10
여성의 사회 진출 지원	정치계 진출	1	2	3	4	5	6	7	8	9	10
	경제계 진출	1	2	3	4	5	6	7	8	9	10
	스포츠계 진출	1	2	3	4	5	6	7	8	9	10
	학계 진출	1	2	3	4	5	6	7	8	9	10
빈부 격차 해소 (국민 70%의 중산층 시대)		1	2	3	4	5	6	7	8	9	10
최상의 복지로 행복한 나라	의료 복지	1	2	3	4	5	6	7	8	9	10
	노후 복지	1	2	3	4	5	6	7	8	9	10
	청소년 복지	1	2	3	4	5	6	7	8	9	10
	장애인 응급시설	1	2	3	4	5	6	7	8	9	10
	소외계층 복지	1	2	3	4	5	6	7	8	9	10
공교육 질을 높이겠다	유치원	1	2	3	4	5	6	7	8	9	10
	초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중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대학입시 제도 만족도	1	2	3	4	5	6	7	8	9	10
	평준화 교육의 만족도	1	2	3	4	5	6	7	8	9	10
보육 문제 해결	기초생활의 해결(분유값 등)	1	2	3	4	5	6	7	8	9	10
	육아 정보문제	1	2	3	4	5	6	7	8	9	10
	양육으로 인해 주부로 경제활동 불가능 문제	1	2	3	4	5	6	7	8	9	10
부동산 문제		1	2	3	4	5	6	7	8	9	10

문2. 개인적으로 국가 정책 중에서는 어떤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1) 보육(미취학 전 단계) 2) 교육 3) 부동산 4) 복지 5) 문화

6) 국방,외교　　7) 경제　8) 정치제도　9) 여성정책　10)기타

문3. 여성 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를 중요한 순서대로 세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부부재산권(균등상속세)　　2) 가사노동가치 인정
3) 성폭력, 성매매, 성인권문제　　4) 보육
5) 국민연금수급권　　6) 여성일자리창출
7) 여성정치 할당제, 여성관리직 채용목표제　　8) 저출산 대책
9) 고령화 여성노인문제　　10)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지원정책
11) 이주여성노동자(국제결혼 등)　　12) 한부모가정 지원

문4. 17대 선거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 정책을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여성정책과 지지후보는 전혀 상관이 없다
2) 여성정책과 지지후보는 별로 상관이 없다
3) 보통 정도이다
4) 약간 관심이 간다
5) 매우 관심이 간다

문5.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의 자질로 다음의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점 만점 - 1. 중요치 않다 〈-〉 10. 매우 중요하다)

1) 리더쉽	1	2	3	4	5	6	7	8	9	10
2) 의사 소통 능력	1	2	3	4	5	6	7	8	9	10
3) 경제 경영 능력	1	2	3	4	5	6	7	8	9	10
4) 혈연, 지연, 학연 및 배경	1	2	3	4	5	6	7	8	9	10
5) 공약 실천 가능성	1	2	3	4	5	6	7	8	9	10
6) 이미지	1	2	3	4	5	6	7	8	9	10
7) 국정운영능력	1	2	3	4	5	6	7	8	9	10
8) 개인의 도덕성	1	2	3	4	5	6	7	8	9	10
9) 양성평등의식	1	2	3	4	5	6	7	8	9	10

문6.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거론된 후보 중에서 가장 여성 친화적인 대통령 후보는 누구입니까?)

- 선호하는 후보　→ 후보명 : _____

문7. 차기정부가 여성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관식)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_____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여성 관련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참여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제언

김 태 현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교수)

참여정부 여성정책 평가[1] 및 제언

김 태 현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교수)

1. 들어가는 말

여성이 아기를 낳고 가족이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회는 영원히 유토피아일 뿐일까? 실제 가능할까? 우리 여성들은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발하면서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에 대한 분홍빛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들떠 있었다. 이제 지난 4년을 차분히 돌아보고자 한다.

우선 참여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들, 특히 여성들은 "참여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시한 제1차 여성유권자 조사결과[2]를 기초자료로 하여, 참여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개략적인 평가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개략적 평가 후에 이어질 구체적 정책인 〈우먼액션플랜Woman Action Plan〉은 또 다른 필자에 의해 완성 될 것이다.

1) 본 평가는, 〈아키아연대〉와 〈국회의원 이계경〉이 공동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오즈마케팅〉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였음.

2) 〈오즈마케팅〉에서, 전국 1000명의 여성(만 19세~만 69세)들을 대상으로, 07년 3월 7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field survey(face to face interview)에 의해서 실시된 여론조사로, 95%신뢰도 기준에 ±3.1%의 오차임.

2. 노무현 대통령의 여성관련 공약 현황

본 장에서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여성관련 공약의 내용과, 그 이행(履行)정도를 살펴본 후, 참여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분야별 평가를 하고자 한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는 〈4대 비전, 20대 기본정책, 150대 핵심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중 여성관련 공약은 12개 항목이었다. 〈표1 참조〉

〈표 1〉 2002년 대통령 선거당시 노무현 후보가 제시했던 여성관련 공약 및 이행정도

분야	공약내용	이행 평가
여성경제 활동참여	①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남녀 불평등 요인을 해소해 성에 의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추진
	② 지식정보산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여성 사회진출 확대와 25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일자리 증가율:02년 2%, 05년 1.3%
	⑥ 새로운 여성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고용불평등을 해소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60%로 높이겠습니다.	- 일자리창출관련예산 03:8,044억원/ 06:1조5,463억원 - 여성경제활동참가율:50.1%
저출산 및 보육	④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만 5세 유아대상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 지난해 전체 아동 중 30%에서 2009년 80%수준까지 단계적 확대
	⑦ 유·사산 휴가제, 출산간호 휴가제 등을 통해 모성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산전후 휴가급여(90일)전액국가부담, 임신 16주이상 여성 근로자 유·사산시 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풀 구성,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월20~30만원으로 증액
	⑤ 유아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 현재 600개교, 1만2,000명에서 2008년 6만8,000명으로 확대). - 관련 예산 : 올해와 내년에 각각 40억원, 70억원 투입

분야	공약내용	이행 평가
저출산 및 보육	③ 홍역 · DPT · BCG 등 필수 예방접종의 무상 실시를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을 시행하겠습니다.	- 06.8<전염병예방법>개정으로,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 임산부와 영유아 무료건강진단은 시행되고 있지 않음.
인권	⑨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특별법」과 「성매매방지법」을 제·개정하고, 가정폭력 방지 교육·상담 강화와 피해자 쉼터 확충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
	⑪ 아동 학대 예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⑫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추진 청소년시설 증가율:년간 5-10%
성평등	⑩ 「호주제」폐지로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이행 - 05.3 민법 개정, 08.1.1일부로 호주제 폐지
	⑧ 지역구 30%·비례대표 50% 여성의원 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를 도입해 5급 이상 공무원관리직 여성비율을 20%로 확대하겠습니다.	- 05.8<공직선거법>개정,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도입, - 지역구 30%할당 권고규정(제47조 ④항) -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05.12 현재 중앙 8.4%, 지방 5.9%

(※ 본 자료는 06. 11월 홍준표 의원실에서 발표한 <노무현 공약평가> 자료를 참조하였음)

이처럼 여성경제활동참여, 저출산 및 보육, 인권 그리고 성 평등 분야에 대해 공약을 제시했던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여성관련 공약을 총 42개의 공약으로 분류(8개 핵심공약, 17개 중점공약, 17개 일반공약)하여, 정책을 이행중이다. 〈표 2. 참조〉

〈표 2〉 노무현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관련 공약

분류	공약내용	비고
핵심 공약	채용목표제 확대 실시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호주제 폐지	
	국무총리산하에 성매매종합대책기구 마련	
	성매매방지법 제정	
	직장보육 및 공동육아제도 활성화	
	저소득 모자가정 보육료 절반을 국가지원, 차등보육료 시행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 및 교육의 확대	
중점 공약	여성부의 협의조정기능 강화	
	여성정책담당관제도 단계적 확대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및 다양한 통일운동사업 지원	
	남북여성의 IT분야 교류활성화로 북한여성의 인력개발 지원	
	여성관련 국제협약가입 및 이행을 통한 여성정책 선진화 추진	
	성매매피해자 및 성매매여성을 위한 시설 및 상담소 확대	
	직장내 성희롱 규제 강화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	
	육아휴직급여 임금의 40%로 확대	
	모부자 가정의 보호시설 확충 및 경제적 지원 확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공적보육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	
	영아 및 장애아를 위한 국공립 시설 확대	
	평가인증 제도를 통한 우수보육 시설 지원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보육 실시	
	야간, 휴일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일반 공약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지원	
	양성평등예산제도 도입 및 통계지표 생산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도입	
	여성인적자원 통계생산체제 구축	
	여성과학기술자 20% 채용목표제 실시 및 지원법 조기 정착	
	교사 및 여성관련법 집행 공무원 양성평등교육 확대	
	명절문화바꾸기 등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 개선	
	미디어 종사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실시	

분류	공약내용	비고
일반 공약	성매매피해 외국여성을 위한 상담소와 쉼터 설치	
	초중고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및 교육홍보 강화	
	사이버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 치료 프로그램 개발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미혼모 지원 서비스 확충	
	농어촌 보육시설 적극 지원	
	보육정보 네트워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출처 : 여성가족부, 06.12.15)

실제, 선거에서 제시된 정책공약은 메니페스토 운동의 일환인 〈SMART & +〉[3]를 기준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여성관련 공약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이므로, 실제 정책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체감지수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3. 참여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제1차 여성유권자조사결과(이하 '조사결과'로 표기함)에 의하면, 참여정부가 전체

3) 한국여성개발원, 우먼타임즈, 〈2006 지방선거 여성정책공약 토론회〉 자료집, p.8-10 참조
〈SMART & +〉 :
S(specific, 구체성 기준: 정책공약 선정이유/목표치/목표달성방법/재원조달방법 등이 구체적인가),
M(measurable, 측정가능성 기준: 목표가 수치나 비율 등으로 제시되었는가/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A(achievable, 달성가능성 기준: 목표가 달성가능한가/목표달성방법(법제도, 지역자원, 기관역량, 추진의지)이 실현가능한가/재원조달이 가능한가),
R(relevant, 적실성 기준: 목표가 현실에 부합하는가/목표간에 상충하지는 않는가/목표가 주민수요에 부합한가),
T(timed, 시간계획성 기준: 임기내 착수 및 완료할 수 있는가/연차별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있는가),+ 기준(경제성 측면 : 비용효과 / 공정성 측면:복수목적효과)

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7개 평가 영역 중에서 '부동산 문제', '빈부 빈부격차해소' 등에 비하면,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오랫동안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목소리 높여 염원한 가시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성의 힘 덕분이라 할 수 있다.

1) 여성경제활동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관련 정책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이 24.5%, '국민연금 수급권'이 10.5%, '부부재산권'이 9.8%, '가사노동가치인정'이 6.4%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① 여성 일자리 창출[4)]

〈현황〉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 이후 49% 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표3, 표4 참조)

〈표 3〉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년도	1988	1997	2000	2003	2004	2005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5%	49.8%	48.6%	48.9%	49.8%	50.1%

〈표 4〉 국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

국가	한국	일본	오스트리아	미국	스웨덴	OECD평균
여성경활율 (04년, %)	53.9	60.2	66.3	69.2	76.6	60.1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OECD 기준(생산가능인구 15세~64세)

4) **노무현 대통령 공약**
"새로운 여성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고용불평등을 해소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60%로 높이겠습니다."

출산 • 육아기 여성 경력단절

특히, 우리나라의 15세~64세 연령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표4 참조)은 OECD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53.9%로 이는 OECD 30개국 중 2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은 25~34세 사이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 때문인데, 이는 이들의 연령대가 출산, 육아연령기인 점을 감안하면, 그 원인을 짐작할 수가 있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사라진데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뚜렷한 M자형 노동공급곡선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보면, 여성들이 출산, 육아 기점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주요선진국은 남성과 유사한 역U자형 구조로 변화)

고학력 여성인력의 저활용 현상 심각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OECD 평균(78.1%)보다 약 20% 낮은 57.6%(04년 기준)로, 출산 육아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포기하는 L자형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여성의 낮은 지위와 높은 임시·일용직 비중

현재,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2/3(04년 63.3%)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노동부 기준의 비정규직 분류로 볼 때에도 여성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 발표

참여정부는, 04년 7월 2일,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계획〉 보고 時, 노무현 대통령이 '여성부분 종합계획'의 수립을 지시한 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여성인력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여, 06년 7월 4일, 〈제4차 여성정책조정회의[5]〉에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을 심의, 확정[6]했다.

---

5) 국무총리주재, 재정경제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평가〉

⇒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진을 위해서는 출산 ·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여성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25세~34세 여성의 출산,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시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50%를 노동시장으로 재 진입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9.7%(2005년 8월 현재)은 약 53.1%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7]의 예측을 보아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키는 임시, 일요근로자 비율 증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 지난 10년간 여성 임금근로자가 26.7% 증가하였으며, 증가분의 86.1%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여성노동 시장의 질적 향상에 대한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의 저하는 90년대 말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남녀간 임금격차(남성에 비해 여성의 임금수준 64.5, 04년 기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진출 직종이 단순서비스, 판매직에 집중되는 현상과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진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 발전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사회서비스 부분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② 국민연금수급권

〈현황〉

- 2006년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 가입비율은 35.7%에 불과하며(표 5 참조), 전반적으로 여성의 국민연금가입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

6) 이 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5%달성, 여성일자리 60만개 확대

7) 권혜자, 〈여성노동시장과 향후 여성고용정책방향〉 중에서

〈표 5〉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성별(2006. 4)

구 분 / 성 별	계	
	인원	비율
계	17,354,659 명	(100.0 %)
남자	11,160,939 명	(64.3%)
여자	6,193,720 명	(35.7%)

-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서도 여성의 가입비율이 낮은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이 취약한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결과로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수급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실제,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2만 4천 명 중 여성수급자가 전체의 58%를 차지,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복지정책 하에서, 빈곤의 위험이 여성(가구주)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노무현 정부는 지난 2월 7일 〈기초노령연금법〉 통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평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여성의 가입비율이 낮고, 국민기초생활수급과 같은 공공부조에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들이 실현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의 중심노동력을 구성하는 남성의 경우 실직 時 사회보험의 수혜자가 되지만, 노동시장의 주변노동력을 구성하는 여성은 자산평가에 기반 한 공공부조의 수혜자가 되어, 결국은 여성의 빈곤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친화적인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하며, 빈곤의 여성화를 막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주부가사노동가치평가 등 부부재산권

〈현황〉

-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친족, 상속편〉 공청회(06.5.3) 이후, 부부공동재산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현행 부부재산제인 별산제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혼인 중 부부재산의 처분의 제한, 혼인 중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의 원칙적 균등화, 배우자 상속권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부재산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가사노동가치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과 학술세미나 등을 실시하였다.

〈평가〉

⇒ 여성의 재산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가사노동가치의 환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가족의 가사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사회자본 축적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직업을 통한 노동에만 가치를 두는 정책은 많은 전업주부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취약한 위치로 전락한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가치(invisible family value)를 눈에 보이는 정책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연금제, 세제 등과 연결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민법의 성 평등성에 대한 검토를 통한 꾸준한 개정 작업을 시도해야 한다.

2) 여성의 대표성 확보 관련[8)]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참여 정부가 내세웠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여성의 사회진출지원에 평균 5.61점(10점만점)을 주고 있는데, 이는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에 대한 평가 항목 중 다른 부분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부분이다.(정치계 5.59/경제계 5.39/스포츠계 5.75/학계 5.72)

8)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초기 4명의 여성장관을 임명하였으나, 현재는 여성부장관과 법제처장관만이 여성장관임.

〈현황 및 평가〉

-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시행하여,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목표 38%(06년)[9], 여성 국회의원 비율 14.5%[10],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10.7% 등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 그러나, 실생활 속에 잔존하는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2006년 UNDP의 여성권한지수(GEM)는 80개국 중 53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다.
-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정책대상별로 볼 때, 제도적인 발전과 정책수혜 결과가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11], 교수[12], 과학기술인[13] 등에 비해 비정규직, 한 부모 가족, 빈곤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의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여성의 권리 보장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 따라서, 법과 관행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일상적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양적 참여의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효과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해야 한다.

3) 보육부분

조사결과에 의하면, 참여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에 대한 평가 중, 보육문제 해결은 4.20(10점 만점)의 평가를 하여, 전체 4.61점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

9)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 02년 30.1% → '05년(36%), '06년(38%), 07년 목표(40%)

10) 국회의원 여성비율 : 03년 5.5% --〉07년 3월 현재 43명, 14.5%
2004년 국회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을 의무화 하는 〈정당법〉 개정으로 여성의원 비율 크게 증가.

11) 정부 전체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 02년 5.5%→05년 8.4%(중앙), 지방 5.9%

12) 국공립 여교수 비율 : 02년 9.1%→05년 10.7%

13)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 수정: '10년 20% → '10년 25%

〈현황 및 평가〉

- 정부는 2004년 6월 보육 사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보육예산[14]을 대폭 늘리는 한편, 보육의 공공성 강화,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차등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어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가 보육예산의 확충으로 공보육 기반이 조성되었다고는 하나, 저소득 위주의 보육·교육비 지원으로 중산층과 맞벌이 가족의 체감도가 낮고,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 특히,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기관보호(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가정 내 양육 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영유아(0세~5세)의 육아지원시설 이용 율은 47%, 특히 0~2세 영아 시설 이용 율은 21.2%에 불과(05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하며, 만 6세 미만의 취업 모 아동 중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비율은 24%(03년, 보건사회연구원)에 이른다.(표6 참조)

〈표 6〉 육아지원시설 미 이용율

(단위 : %)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시설미이용율	53.0%	93%	81.3%	62.6%	41.9%	33.3%	20.9%

※ 출처 : 2005년 보육통계(여성가족부),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 또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즉,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나 야간보육시설 등의 확대가 필요하며,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부모들로 하여금 보육의 부담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를 일소해야만, 저 출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14) 보육예산증가추이 : 2002년 2,103억원 → 2004년 4,050억원 → 2006년 7,910억원

4)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인권분야

여성관련 정책 중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여성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보인 부분이 바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성 인권 분야였다.

〈현황 및 평가〉

-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여성부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15]해왔으나, 〈성매매방지법[16]〉이 참여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정책 개발보다는 시설 관리 측면에 집중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 특히,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부분은 경찰과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일 만큼 범정부적, 범부처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가동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또한, 성폭력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피해자 인권보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현재, 성폭력 고소 율 10% 미만, 기소율 43%)

- "성매매 추방"을 참여정부 최대 정책과제로 홍보할 만큼, 정부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탈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건전한 성윤리 정착을 위해 복권기금을 배정[17]하고 있다.

  ⇒ "성매매가 범죄"라는 대국민 인식의 확산에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둔 측면이 있지만, 아직, 유사성매매 업소의 난립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행위의

---

15)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예산 : 2001년 11억원 → 2006년 약 58억원(5배 이상 증가)
성폭력 부분 예산 : 2001년 5억4천만원 → 2006년 38억원(6배 이상 증가)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치료 및 여성긴급전화 1366과 One-stop지원센터 운영예산 등을 포함하면 약 13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증가

16) 2004년 9월 24일 시행

17) 복권및복권기금법의 제정('04. 1.29) 및 시행('04. 4. 1)에 따라 2004년 복권기금액 중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치료회복 및 의료, 법률, 직업훈련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으로 배정하여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및 상담소 61개소에 17억을 지원함.

확산, 해외원정성매매 현상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등 아직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5) 가족정책

- 여성가족정책은 전 생애에 걸쳐 여성의 행복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 정책은 태아기, 신생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24~34세) 여성을 위한 정책이지 장년기, 노년기 여성을 위한 정책은 매우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차기 정부가 여성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일자리창출, 보육문제해결' 다음으로 해야 할 일로 '고령화/노인문제'를 꼽고 있으며, 이는 '남녀평등/양성평등' 보다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저 출산·고령화 사회라는 핵폭탄만큼 강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증가하는 건강한 고학력 여성노인을 활용할 정책 마련이 거의 없다.
  노부모를 수발하는 젊은 여성과 여성노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대상자의 판정등급에서 중증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있어 당분간은 재가노인을 시설보호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 지역사회에서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사는 재가 서비스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 혼인에 대한 이혼비가 1960년에 3.8%이었으나 2004년에는 44.8%(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로 급상승하여 가족해체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 한 우리사회에서 가족갈등으로 심화되어 이혼을 고려중인 부부에게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이혼 하더라도 이혼 후 자신 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및 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더욱이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이주가 1990년에는 1%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9.9% 인 31,180명(통계청, 각 년도)에 이르고 있는 데 이주여성이 안고 있는 문화적 차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인한 가족 갈등 극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조모와 손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the skipped generation family)의 증가로 조손가족 지원 정책이 보강되어야 한다.

- 호주제도의 폐지에 따라, 호주 중심으로 편제되고 있는 현 호적제도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해,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개정 민법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08년 1월 1일로 정하였다. 이 시기는 당초 준비기간이 1년 반에서 3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계부처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이제 시행을 불과 9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도 새로운 신분등록관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법무부, 대법원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가족정책은 '남여참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가족정책은 여성만 강조하고 남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미비하다. 의식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남성의 양성 평등 실천에 대한 참여가 마련되어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의 우먼액션플랜
(WAP:Woman Action Plan)

이 계 경 (국회의원,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우먼액션플랜
(WAP:Woman Action Plan)

이 계 경 (국회의원, 한나라당)

1. 들어가는 말

21세기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시대를 개막"하는 것,

둘째, 글로벌 경제 시대의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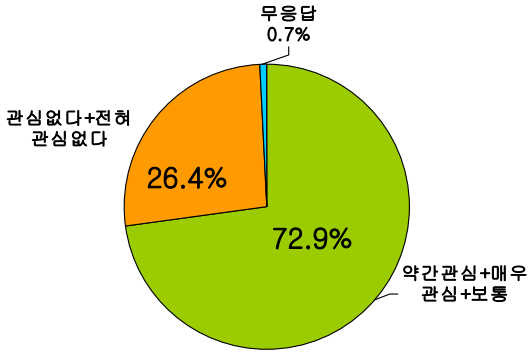
셋째, IT 혁명, 즉 technology revolution 시대의 개막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중 그 첫 번째가 바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특징으로 꼽을 만큼, 21세기는 여성이 주도하는 시대로써,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읽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은 정체되는 것은 물론 추락할 수도 있다.

특히 올 12월,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의 선택이라는 중차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여성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여성정책 고려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26.4%의 응답자만이 여성정책과 무관하게 선택하겠다는 응답을 보면서, 후보들이 여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걸 다시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림 1. 참조〉



<자료 출처 : 여성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18]

〈그림 1. 여성정책과 지지후보 선택〉

따라서, 저는 우리 한나라당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성유권자들에게 어떤 철학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성유권자들에게 어떤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한나라당 우먼액션 플랜

1) 여성경제력 확보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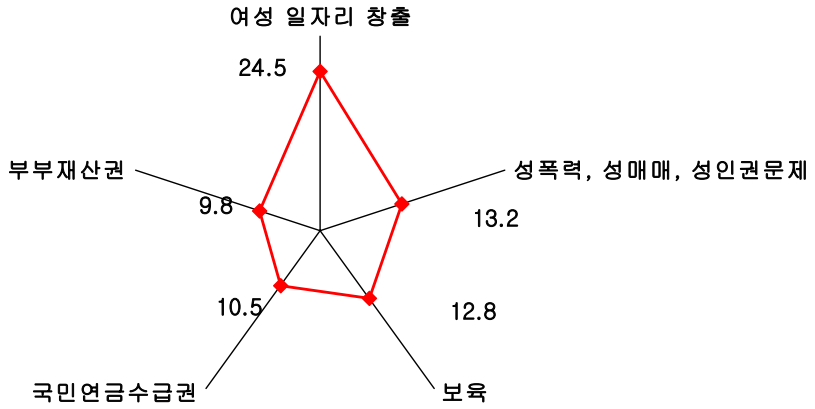
우먼액션플랜(WAP) 1. 여성경제력 확보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여성일자리 창출 → 차세대 여성인적 자원 개발 및 지원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기업 환경 만들기** → 취업주부의 보육, 육아휴직 및 임신출산에 따른 고용차별해소 →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비정규직화 문제 해결 ○ **여성기업 지원** → 자금지원, 판로개척, 정보화 지원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원화된 지원 ○ **부부재산권 확보** → 주부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 시스템 개발

18) 본 여론조사는 NGO 단체인 〈아키아연대〉와 〈국회의원 이계경〉이 공동의뢰하여, 〈오즈마케팅〉에서 3월 7일부터 열흘간 조사를 실시했음.

지금 이 순간, 여성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여성문제는 무엇일까?

첫째, 여성의 경제력 확보에 대한 비전이다.

실제, 〈여성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성관련 정책 관심사를 묻는 질문의 경우,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인 51.2%가 여성의 경제력 확보와 관련된 여성정책 즉, 여성일자리 창출(24.5%), 국민연금수급권(10.5%), 부부재산권(9.8%), 가사노동가치 인정(6.4%) 등의 항목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다. 〈그림 2. 참조〉



<자료 출처 : 여성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그림 2 여성관련 정책 관심사〉

오늘날 여성들이 이처럼 경제력 확보에 강한 욕구를 보이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우수 인력풀이 형성[19]된 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 절박한 이유는 여성들의 경제적 빈곤의 심화로,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빈곤의 실태를 보면, 아시아 지역의 경우, 아시아 인구의 절반이 넘는 18억 5000만명(57.4%)이 2달러 이하의 생계비로 하루를 연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 여성고학력화로 인한 우수 여성 인력풀 현황

○ 2005년 현재 전체 대학재학생 중 여성 39.2% 차지. ⇒ 2013년에는 전체 대학재학생 중 여성 비율 42%로 전망. ※ 대졸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57.6% (2003년 OECD국가 대졸여성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78.1%, 일본 67.0%, 오스트리아 80.5%, 미국 80.0%, 스웨덴 88.2%)

(2003년 기준, 아시아 은행 통계). 특히 19.3%인 6억2100만명은 하루 생계비가 1달러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명중 1명은 절대 빈곤 상태에서 지내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최초 여성총리가 탄생하고, 사법시험 합격자와 의대 입학생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할 만큼 여성의 사회진출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빈곤화 정도 또한 매우 심화[20]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빈곤의 문제는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력 확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방향 설정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여성경제력 확보방안에 대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① 여성일자리 창출방안과 차세대 여성인적 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② 취업주부의 보육, 육아휴직 및 임신출산에 따른 고용차별해소,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비정규직화 문제 해결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기업환경만들기,

③ 자금지원, 판로개척, 정보화 지원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원화된 지원 등 여성기업 지원,

④ 주부가사노동 경제적 평가 시스템 개발로 부부재산권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실천해야 한다.

---

20) 우리나라 여성 빈곤화 실태

○ 빈곤인구 중 여성이 2/3, 가난한 노년층의 절대 다수(80%) 여성 - 특히, 이혼 여성의 빈곤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혼후 여성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임시 일용직에 종사, 월평균 근로소득도 1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 07. 2. 13> - 고령여성의 빈곤 : 65세 이상 인구의 23%가 월평균 소득이 아예 없었고 44.6%가 50만원 미만, 17.7%가 50만~100만원으로 나타남. 소득이 없는 남성은 9.5%, 50만원 미만은 28.9%로 빈곤이 덜함.<06.8월 국민연금 실태조사 결과>

2) 돌봄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비전 – 아이돌봄(보육), 노인돌봄

우먼액션플랜(WAP) 2. 돌봄노동의 사회화 비전
▶ **아이돌봄(보육)** ○ 공보육 시스템 확보 ○ 보육서비스 질 개선 방안 →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 마련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영아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시설 확보) ○ 안전관리 방안 → 보육시설 안전관리 및 차량 안전운행 강화 ▶ 노인돌봄 ○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 방안 → 노인 의료비용 지원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시스템 확보 → 노인 질병 전문치료병원 확보 → 장기요양보호시설 확보

둘째는, 돌봄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돌봄 노동은 아이돌봄과 노인돌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이돌봄의 문제는 대부분 보육의 영역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 아이돌봄(보육)

우선, 보육 문제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①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으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와,

②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임신·출산·육아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는 여건과 환경조성이 되어있느냐의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율은 30.8%(여성가족부, 2005)로 전체 영유아의 1/3정도만이 이용하고 있는 수준이며,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보육예산에 대한 정부 재정분담율도 31.9%에 불과,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부모의 재정부담비율이 너무도 높다.

또한,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여성경제활동 저해는 물론, 저출산(합계출산율 1.08명)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도 해결할 수가 없다.

실제,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률 유형[21]을 보면, 임신·출산, 육아가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 취업률이 감소하는 M자형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보육에 대한 비전제시를 위해서는,

① 보육에 부모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보육 시스템 확보,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그리고, 영아보육시설이나 시간연장형 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③ 보육시설 안전 강화 및 차량운행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④ 건강 및 영양관리 강화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노인돌봄

늘어난 평균수명[22]으로 인해 노인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5년 9월,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치매나 중풍 등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가운데 적게는 12.1%에서 많게는 14.8%로 대략 5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노인 요양시설 인프라의 부족으로, 이들 노인들을 대부분 가족들이 돌보고 있으며, 가족 중에서도 주로 여성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

21) 〈2005년 여성통계연보〉의하면, 남성의 경제활동은 꾸준히 늘어나다가 35~39세에 정점(93.4%)을 이루는 종(鍾)형태지만, 여성은 25~29세에 높았다가(63.9%) 낮아진 뒤 40~44세(65.5%)에 정점을 이루는 M자형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남.

22) 여성의 평균수명 80.8세, 남성은 73.8세로 여성의 경우 OECD 국가의 평균인 80.6세를 넘어섰음.(2003년 통계청 작성, 2003 생명표 작성 결과)

23) 2003년도 전국가족조사(장혜경 외, 2003)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 분포중, 며느리 40.2%, 배우자 27.4%, 딸 10.6%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노인의료비용 지원,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시스템 확보, 노인질병 전문치료병원 확보,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시설 확충 등의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여성 인권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성폭력·아동안전 – 비전

우먼액션플랜(WAP) 3. 여성 인권 비전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성폭력·아동안전 –
○ **여성인권 침해 방지 방안** → (유사)성매매 방지 및 탈성매매 여성 자립 및 재활 지원 강화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 ○ **아동성폭력 방지 및 안전대책 마련** → 아동성폭력 전담부서 마련 → 아동성폭력 피해수사의 선진시스템 도입 및 정착 → 아동성폭력 범죄 재발방지 방안 마련 (※07.4월 전자팔찌법안 본회의 통과) → 아동성폭력 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 아동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강화

셋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성폭력·아동안전 등으로 인한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비전 마련이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한 여성의 인권침해는 인륜을 거스르는 범죄로 그 대책이 강력하게 마련되어야 할 부분이다.

성매매의 경우, 2004년 9월 〈성매매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국내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어 국민들의 인식에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유사성매매 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유사성매매 행위 증가, 인터넷을 통한 신종 성매매, 그리고 해외원정 성매매[24]까지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인권이 유

24) **※ 해외원정 성매매사범 단속현황**
- ○ '06년 국내 비자발급 알선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현황('06.3. 31현재) :비자발급 불법 알선브로커(12명), 여권 등 위변조행사 사범(53명), 합법가장 기업형 알선 조직(194명)
- ○ 최근 각국 한인 성매매 적발건수(알선업자 포함, '06년 미 법무부) :미국('05.6~'06.8월)-332명, 호주('02.7~'05.6)-183명, 대만('05.1~12)-13명

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아동성폭력의 경우인데,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로만 지난 한 해 동안 980명(하루 평균 세 명 꼴)의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했다. 아동성폭력 피해 후유증은 평생을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반인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의 20%만이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다.

이처럼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①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및 탈성매매 여성의 자립 및 재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② 아동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4)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우먼액션플랜(WAP) 4.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확대 방안** →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방안 → 여성임원 확대방안(할당제) →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여성의 (지방)의회진출 활성화 방안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넷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에 대한 비전제시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으로 여성의 권한척도가 75개국 중 53위에 불과하다.

참여정부 1기에는 여성장관이 4명[25]이었으나 2007년 2월, 현재 여성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법제처 장관 2명에 불과하며, 청와대 비서실도 참여정부 초기에는 수석과 보좌관이 각각 1명이었으나 2년이 지난 후부터 그나마 한명도 없다. 2007년 2월 현재 청와대 비서관 중 여성비율은 6명으로 전체 60(수석급 포함)명 중 10%이다.[26]

여성관리직 진출 현황 역시 미흡하다.

---

25) 여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환경부

26)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노무현 정부 여성정책평가 토론회 자료집〉

한국의 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평균 3.3%에 불과[27]하며,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10.2%다.

특히, 경제적 성장동력으로 여성의 인력활용을 해결방안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여성을 고위직에 중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미국의 매킨지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매출 순위 100대 기업의 경우 96년부터 2000년 사이 여성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주주총수익률이 27.6%로 100대 기업의 평균인 23.1%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의 대표성이 인정받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가족문화권 확보에 대한 비전

우먼액션플랜(WAP) 5. 가족문화권 확보에 대한 비전
○ **가족중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서비스 제공**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방안 ○ **외국노동자,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문화가족 지원 대책** →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 확보 즉, 상담소, 모성보호센터, 취업정보센터, 한국문화와 언어교육제도 등 →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 시스템 강화 즉,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정보화교육 지원강화 ○ **새터민 가족 지원 대책**

다섯째, 가족문화권 확보에 대한 비전제시이다.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28]함에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 가

27) 〈2005 세계여성경제포럼〉에 따르면, 북미지역 기업들의 여성이사, 임원비율 15.6%, 유럽 7.6%, 스웨덴 27%, 미국 14.8%에 이름.

28) 앨빈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미국주요기관들의 변화를 속도에 비유하고 있는데, 기업체나 사업체들은 시속 100마일로 가장 앞서 가면서 다른 부문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치에 의해 가족을 바라보는 정책은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 결혼, 동거, 이혼, 재혼 등에 대한 태도가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가족의 형태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및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새터민 증가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다문화 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1990년 5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0년 50만명으로 급증했고, 2006년엔 82만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6 ~ 1.7%에 해당한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국제결혼 비율이 13.6%에 이르러 8쌍 중 한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국제결혼 중 35.9%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성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아들이고 있어, 이 여성들과 이 여성들이 낳을 아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가족의 가치에 맞는 가족문화권 확보를 위한 비전제시를 위해서는,

① 가족중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여, 가족간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② 미혼모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을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의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등에 대한 다문화가족대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즉,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 모성보호센터, 취업정보센터, 한국문화와 언어교육 제도 등의 마련을 통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 확보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 정보화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④ 새터민 가족 지원 대책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족정책의 한 분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시민단체(시속 90마일), 가족(시속 60마일)이 빠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하여, 시속 3마일의 정치의 변화보다 가족이 20배나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예견했다.

6) 여성건강권 확보에 대한 비전

우먼액션플랜(WAP) 6. 여성건강권 확보에 대한 비전
○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검진 시스템 확보** → 취학전 아동의 종합건강검진체계 마련 → 미취업여성 건강검진 지원방안

여섯째, 여성건강권 확보에 대한 비전이다.

생애주기에 국민건강 증진 방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취학전 아동이나, 미취업 여성들의 경우,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취학전 아동의 시력검진 결과를 보면, 정부에서 실명(失明)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력검진의 혜택을 받는 아동은 전체 취학전 아동 225만명 중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46만명(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경우, 취업과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의 정기건강검진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지만, 미취업 여성의 경우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검진 시스템을 확보하여, 여성건강권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성주류화 정책 확대 실시

우먼액션플랜(WAP) 7. 성주류화 정책 확대 실시 -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교육 등 -
→ 성인지 예산 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성별영향평가의 실질적인 실행방안 마련 → 성별분리 통계 시스템 구축 → 성인지 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

일곱째,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확대 방안이다.

“성주류화”란 국가정책의 입안과 실행, 평가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관점이 도입되게 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의 중요한 정책, 전략, 계획 및 사업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전략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한 성주류화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 교육 등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맺음말

여성과 남성, 우리 다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7개 분야에서의 발전적인 비전과 정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가올 12월 중요한 선택의 지점에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요구가 공약으로 반영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토 론

박 명 순 (경인여대 교수)

MEMO

MEMO

토 론

문 경 란 (중앙일보 논설위원)

MEMO

MEMO

국회의원 이계경
제45차 정책 토론회자료집

지난 4년, 여성은 얼마나 행복했나?

발행일 : 2007. 4. 9.
발행인 :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국회 양성평등포럼 공동대표)
발행처 : 국회의원 이계경 (☎ 788-2450)

비매품